

대한관세법인

NEWS LETTER

2018.NOV





"해외직구 반품할 때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소개팅에 나갈 때 입으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미화 800 달러인 원피스를 구매한 A 씨는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마냥 들떠 있다.

택배기사로부터 원피스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본 순간, 서양인 기준 크기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옷이 너무 커서 거실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다.

해외 판매자와 실랑이 끝에 겨우 옷을 반품하고 물품대금은 환불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수입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과연, A 씨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 씨가 납부한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4 월 10 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 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및 시행 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 [개선] 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 및 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의 신고절차와 긴급상황 재고조사 사전통지 생략 규정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6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제조·복합물류업체의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 제도 이용 및 AEO 업체의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반입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관련 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도착 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 장치장소) 도착 전에 심사 및 결재 등록을 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2항에 따른 보세운송 도착보고가 된 때에 전산에 의해 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소비신고의 심사와 관련해 세관장은 AEO 업체로 공인받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장치장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8절의 전자통관심사 규정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의 신고절차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서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대해서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고, 물품 반출 시에는 [별지 제 3의 1호 서식] '품목단위 반출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정유출 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잡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확대 실시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업체를 직접 발굴해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잡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 협정과 품목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잡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는 2 개의 FTA 를 중복체결한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인도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두 협정 중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몰라 높은 세율의 협정을 선택하는 업체가 다수 있어, 이들 업체에게 저세율 협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인조섬유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 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 5%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저세율의 한-베트남 협정 적용을 신청하면 업체는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서울세관은 작년, 베트남·싱가포르·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소기업 279 개에 대해서 잡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약 3 억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업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를 위해 중복협정별 세율차가 존재하는 3400 여개 품목의 올해 수입실적을 분석하여 관내 업체 2880 개가 수입하는 290 여개 물품을 선정, 해당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협정별 세율 및 협정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을 통한 예상 혜택금액은 총 54 억원이며, 이 중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가, 원산지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의류 산업과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FTA 포털에 중복협정 체결국가 세율비교표를 등록해 업체 스스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UAE AEO MRA, 10 월 1 일부터 전면 이행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10 월 1 일부터 한·UAE AEO MRA 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UAE 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2015 년 12 월 UAE 와 협상을 시작한 이후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 년 10 개월여 만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UAE 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 2 의 수출국이자 '2020 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와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관세청은 한·UAE AEO MRA 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일반화물보다 먼저 검사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통관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 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수출입 현장에서 생기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 를 추가로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美·中 무역분쟁에 새우등 터지는 韓”

최근 미국의 對중국 3 단계 보복관세 부과 등 美·中 무역분쟁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관세청은 ▲美 제 301 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관리 안내 등 1 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2 차 특별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 시스템 주의사항 자동 안내, ▲美 보복관세 3 차 해당 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판정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 또는 중국産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가 한국産인지 중국産인지를 가능해볼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 부서는 수출입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가 한국産이면 한·미 FTA 협정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국産이면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돼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될 수 있다.

美 무역법 제 301 조에 따라 부과하는 對중국 보복관세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美·中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팝업창이 뜨도록 하는 등 업체가 수출 전에 유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 가장 크다

美 무역확장법 제 232 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對美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고, 수출대수 감소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 월 1 일 발표한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對美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우리나라가 22.7%로 가장 높고 일본, 중국, 독일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조립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産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멕시코,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美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 억 달러로 對美 총 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생산 및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對美 수출 중 완성차 및 부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었으며, 멕시코(35.8%), 한국(33.7%), 독일(26.7%), 캐나다(20.7%)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는 미국 내 자동차 소비 및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산·판매 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해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11.1%, 수입 완성차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이 6,231 달러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 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미국産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EU·베트남 FTA 19 일 서명...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야심찬 FTA"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7 일 EU 와 베트남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와 베트남 정부는 브뤼셀에서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인 오는 19 일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FTA 는 EU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하는 FTA 다.

베트남은 ASEAN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EU 와의 교역 규모가 큰 나라다.

FTA 에 따르면 양측은 향후 10 년간 거의 모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베트남은 또 FTA 협정문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EU 측은 밝혔다.

EU 와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상품 476 억 유로, 서비스 36 억 유로에 달한다고 EU 집행위는 집계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와 베트남 간 FTA 는 EU 가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가장 야심 찬 FTA"라고 평가했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이 협정이 가급적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이어 캐나다도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추가 관세 25%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잠정)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중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용(유정용) 강관, 열연 강판, 컬러강판 등 7개 제품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할당량(쿼터)를 설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발 철강관세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재무부 관계자는 "값싼 수입철강제품이 캐나다로 몰려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가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한국의 연간 철강수출 규모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상단에 불과하지만, 미국발 철강관세 조치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세이프가드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수입 규모는 물량 기준 37만 t. 금액 기준 3억 2000만 달러(3635억원) 상당으로 18위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 조를 앞세워 한국산 철강제품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EU 역시 7월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할당받은 연간 쿼터를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한 한국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달 철강수출규모가 40%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9개월이 소요되지만, 갑작스러운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6 억명 묶을 초대형 FTA 탄생하나...

미국 일방주의 통상을 제어

동남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드리워지고 있는 암운에 제동을 걸 큰일을 시도 중이다.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경제권을 목표로 지난 2015 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킨 뒤 인구 6 억 5,000 만의 시장 통합에 잔걸음을 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AEC 보다 5 배 이상 큰,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더해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며 타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결될 경우 다자주의 무대에서 발을 뺀 뒤 양자관계 우선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뿌리고 있는 미국에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 수는 16 개에 불과하지만 RCEP 이 출범하면 세계 인구 절반인 36 억을 묶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경제규모는 세계 전체의 3 분의 1 이다.



◇'브레인' 싱가포르, 외교력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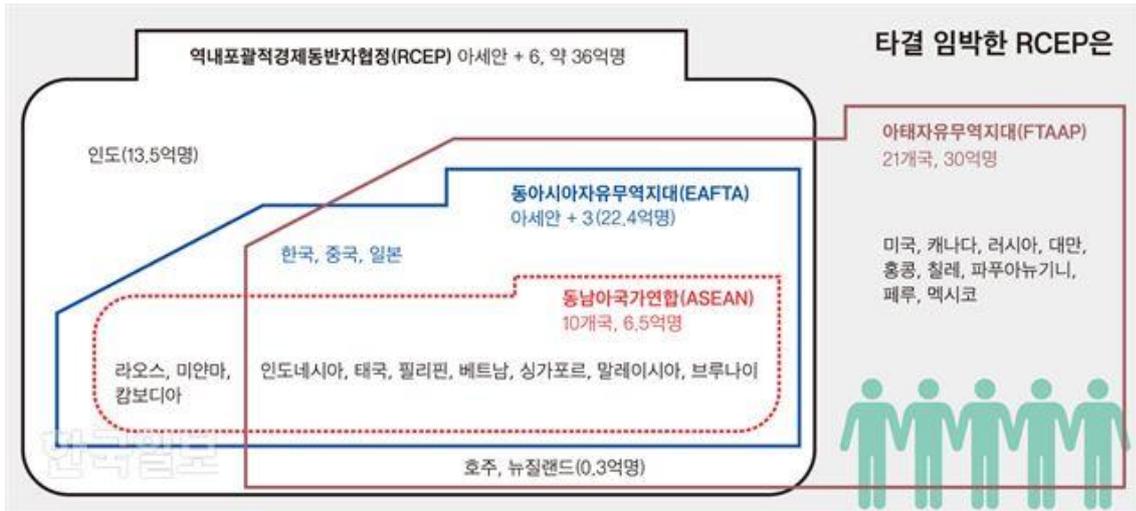
17일 아세안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가 RCEP 최종 타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아세안의 '브레인'인 싱가포르가 임기 중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며 "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역내 통상 장관들이 지난 7월 일본에서 가진 RCEP 회의에서 선언한 '연내 출범' 일정을 한달 가량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AS에는 RCEP 협상 16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싱가포르국립대 중동연구소장은 이달 초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소(ERIA) 행사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장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공동시장과 공동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서 아세안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세안이 미국이나 중국의 손 안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AEC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이 RCEP에 나서는 이유와 일치한다.

사실 RCEP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RCEP에 참여하는 6개국 모두 FTA 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업 기반을 이제 닦아가고 있는 인도가 중국 상품의 유입을 반대하는 바람에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 독주에 뭉치는 아시아

하지만 지난 6월 초 모디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열리고 있던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의 미래가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역설, RCEP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싱가포르와 한국 등 교섭국들의 인도에 대한 끈질긴 설득 작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 매체 커넥티드 투 인디아는 '싱가포르 이스와란 통상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에게 RCEP 조기 타결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참가국 개발 단계를 고려한 특별한 대우(differential Treatment)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광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서비스와 투자부문에서 먼저 문을 열고 상품에 대한 협정은 시간을 두고 개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액트 이스트(Act East)’ 정책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인도는 RCEP에 나설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액트 이스트 정책은 모디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종의 동진 전략이다.

외교장관을 지낸 인도 정책연구소의 시암 사란 선임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경제활동이 축소되면 이 지역에서 안보·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액트 이스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지역 경제 통합에 참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인도는 RCEP 참가 16개국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모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메시지’ 중심의 낮은 FTA 가능성

인도의 이 같은 위기의식과 함께 RCEP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면서 형성된 중국과 일본이 급속한 관계 개선이다. 무역전쟁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은 신규·대체시장 필요에 따라 인도와 아세안으로 시장을 넓혀야 하고, 일본은 지난 3월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미국이 갑자기 빠지면서 생긴 공백을 다른 시장에서 찾아 메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아세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던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근 양국은 통화 스와프 재개에도 합의했다. 이달 말 베이징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번순 고려대 경제통제학부 교수는 “인도가 중국의 공산품 관세 장벽을 허물기는 힘들 것인 만큼 RCEP 이 타결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FTA 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대신 아세안 중심의 자유 무역 의지를 대외에, 특히 미국에 알리는 정치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중심의 초대형 FTA 출현이 통상협상에서도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미국을 다자무대에 끌어들이고,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조기에 앞당기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 전자제품·통신기기 관세 인상...환율방어 + 보호무역

인도가 일부 전자제품 품목과 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의 수입을 억제하고 가치 하락 중인 루피화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인도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2 주 만에 두 번째다. 수입 장벽을 높여 '생필품이 아닌 품목'의 수입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최근 일련의 관세 인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시스코 시스템즈, 화웨이 테크놀로지, ZTE,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조치는 루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루피화의 가치는 올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14% 하락 중이다. 이머징마켓의 불안과 경상적자 확대 등이 루피화 약세를 부추겼다.

각각의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인상 폭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인도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의 목록에는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인터넷 전화, 이더넷 스위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 관세 인상은 12일부터 발효된다. 기술 연구업체인 카운터포인트의 네일 샤에 따르면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바르티 에너텔, 이데아 등 인도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샤는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인상은 광섬유와 LTE 망을 사용하는 고속 광대역의 출시를 늦추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 국내 제작업체인 타타 텔레서비스 등 국내 통신기기 업체들에는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모디 총리의 정권은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폰과 텔레비전 세트 등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서 지난 2월에는 40여개의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선글라스, 주스, 자동차 부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난달에는 19 개의 '생필품이 아닌 품목'에 대한 관세를 높였다. 여기에는 에어컨, 냉장고, 신발, 스피커, 여행가방, 항공기 연료 등이 포함된다.